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January vol.109

2026년도 예산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January
vol. 109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4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2026년도 예산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 재정정보의 공개와 국민 이해도 증진을 통해 재정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 축적된 20년간의 데이터와 KODAS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기반으로 2026년 재정혁신의 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정 NOW

04
재정 칼럼
2026년도 예산의 특징과 방향
-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언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22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11월 기준 재정동향

2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6
재정캘린더



04

재정 NAVIGATION

38
재정제도 이야기
저출생 시대, 세제로 양육 부담을 덜다

44
재정이 MONEY
반도체 경기가 한국 경제와 증시를 살린다

48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조선시대 호조와 재정 운용

52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백범 김구,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살림

FIS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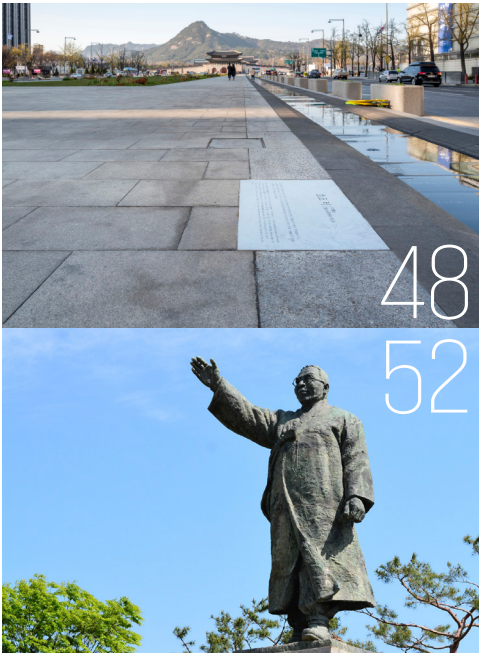
56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58
재정원 소식

60
애독자 코너



44



48
52

2026년도 예산의 특징과 방향

기술기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기술기반 성장 동력
확충으로 AI 3강 도약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회보장 지출 강화



지출구조조정 27조원
규모 재정혁신 추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성장 촉진 방향



I. 2026년도 예산 해설

1. 2026년 예산 개요

2026년 예산이 지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6년도 예산은 총수입 675.2조 원, 총지출 727.9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수입 중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 원이 감소하고,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1.0조 원 증가가 예상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다. 총수입은 2025년도 추경예산 대비 32.8조 원 증가한 것이고, 정부예산안 대비 1.0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24.6조 원 증가하였고, 정부안 대비 0.1조 원 감소한 것이다. 2026년도 통합재정수지는 52.7조 원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GDP 대비 1.9%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07.8조 원 적자가 전망되며, GDP 대비 3.9%가 될 것이다. 2026년도 국가채무는 1,413.8조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된다.

정부의 총지출 727.9조 원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4.6조 원, 추경예산 대비해서 24.6조 원 증액된 예산이다. 이를 12대 분야별로 보게 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17.4조 원, R&D 분야 5.8조 원, 국방 분야 4.6조 원이 전년 추경예산 대비 증액되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보면 외교·통일 분야에서만 0.7조 원 감액되었는데, 전년 추경 대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5.8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5조 원, 외교·통일 분야 0.3조 원이 감액되었다.

2. 2026년도 예산의 중점부문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를 위한 재정투자이다. 둘째,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사회 분야 지출이 주목된다. 셋째,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지출이다. 이러한 3가지 방향의 투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분야들의 중점 투자는 총 57조 원의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먼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에 관련한 투자를 기존의 51조 원에서 2026년에는 72조 원 투자로 41% 증액하였다. 이는 AI 3강을 위한 대전환 투자 10.1조 원, 신산업·R&D 혁신 투자 44.3조 원,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투자 4.3조 원,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투자 7.9조 원 투자,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투자 5.7조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사회 분야 재정 지출로서 지방거점성장을 위한 지출 29.2조 원,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출 70.4조 원, 촘촘한 사회안전메트 지출 32.1조 원, 민생·사회연대경제 지출 6.2조 원,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에 대한 지출 17.6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분야는 국민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 지출로서 재난 예측·예방·대응 지출로서 5.8조 원,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출로서 23.8조 원이다.

3. 분야별 자원 배분 현황

분야별 자원 배분을 보면, 규모 순으로는 보건·복지·고용, 일반행정, 교육, 국방, R&D, 산업 순으로 총지출이 구성되었다. 보건·복지·고용에 269.1조 원, 일반행정 분야에 121.4조 원, 교육 분야에 99.9조 원, 국방 분야에 65.9조 원, R&D 분야에 35.5조 원, 산업 분야에

31.8조 원, 농림분야에 28조 원, SOC 분야에 27.7조 원, 공공질서 분야에 27.3조 원, 환경 분야에 13.9조 원, 문화 분야에 9.6조 원, 외교·통일 분야에 7조 원의 지출이 확정되었다. 전년도 본 예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이며, 전년 대비 20.4조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6.51% 인상에 따른 영향,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출확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4대공적연금 지출확대, 모성보호, 육아지원, 장애인 고용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 부문 지출확대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R&D 분야로서 전년 본 예산 대비 19.3%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R&D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5% 이상 증액하는 투자로서 2025년 29.6조 원에서 2026년 35.3조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AI 등 첨단사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로서 A(인공지능), B(바이오), C(문화콘텐츠), D(방산), E(에너지), F(첨단제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첨단분야 인력 3.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에 따른 투자비 증액으로 파악된다. 한편,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는 외교·통일 분야로서 전년 예산 대비 0.7조 원이 감소되었다. 이는 국가별 협력사업, 민간·국제기구협력 차관 등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감액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된다.

II. 2026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예산은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한

특징과 재정혁신을 통한 특징으로 구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중점 부문은 정부의 재정 분배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재정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1. 증액 예산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중점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에 대한 투자,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지출,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의 증액이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부문의 사업들을 통해서 각 분야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2026년을 기술주도 혁신경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X(AI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먼저 로봇·자동차·조선·가전·팩토리 등 피지컬 AI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5년간 6조 원을 투자한다. 신규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 AX-Sprint(자동음향조절 마이크, 피부 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에 대한 투자가 있다. 복지·고용, 납세 등의 공공분야 AI 도입·확산을 위한 공공 AX 투자가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내의 고급인재 11만 명을 육성하는 사업과 고성능 GPU 1.5만 장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초혁신 경제를 위한 R&D 투자가 확대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예산이 증가하며, A(인공지능), B(바이오), C(콘텐츠), D(방위산업), E(에너지), F(제조업)의 첨단기술 고도화

에 대한 투자, 첨단인력 3.3만 명 확보(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투자가 증액되었다. 한편, 5년간 150조 원 수준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지출이 마련되었으며, 모태펀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과 수출지원 예산이 4.3조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에에는 중소조선사 함정 MRO 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으며,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 바우처사업, 유통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유망 내수기업 수출 업체로 육성 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있다.

사회 분야 예산의 증액도 주의 깊게 볼 분야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사회 복지 분야 지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방성장 거점의 구축에 29.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 동남권 조선 산업, 서남권 에너지 산업, 대구경북권 휴머노이드 산업, 중부권 첨단과학 등이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도입되는데, 월 15만 원, 7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존 0.9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이 예산안 기준 전년도 62.6조 원에서 70.4조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향, 단계

적 무상 교육·보육의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신설, 비수도권 취업청년의 근속 인센티브 사업의 신설 등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산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사업도 확대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4인가구 생계급여의 확대, 에너지바우처의 확대, 위기가구 생필품 지원 사업의 신설 등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발달 장애인 돌봄사업의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자살위험군을 위한 사업과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 사업 등이 2026년도에 반영되었다. 사회분야 지출에 있어서 주목할 분야가 산업재해 예방 투자와 고용안전망 강화 분야이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필수 안전시설·장비 지원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새롭게 일터지킴이를 선발하고, 근로·산업안전 감독관을 늘리는 사업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을 위해서도 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상향하였다.

증액 예산 중에는 안전과 안보 분야가 있다. 특히 재난과 안보에 대한 지출은 재정의 본래적인 공공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을 예측·예방·대응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의 증액, 산불감시 카메라 확충, AI 활용 재난대응 등의 사업이 있으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신임경찰의 확대, 현장대응 장비의 확충 사업이 있다. 국방 예산에 있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내일준

비적금의 신설이 있으며, KF-21 전투기 개발 양산 사업, 첨단무기에 대한 개발의 투자 확대, K-방산 육성 지원을 위해 방산 스타트업 발굴 육성과 수출지원 사업이 있다.

2. 재정혁신의 방향

2026년도 예산은 재정혁신을 동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의 확대와 함께 재정관리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재정혁신을 추구한다고 평가한다. 재정혁신에는 지출 구조조정, 지방 우대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강화, 출연 연구기관의 재정지원 방식의 개편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에 포함된 지출구조조정은 역대 최대수준인 27조 원 규모이다. 특히 사업의 재구조화와 경상비 의무 지출의 절감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단기간 급증한 ODA 사업의 정상화를 비롯한 저성과·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서 1.6조 원이 절감되었다. 소위 쏘미 중소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0.7조 원을 축소하여 유망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R&D 분야에서 비 도전적 소규모 수탁과제 0.5조 원을 감축하여 국가임무 대형 과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반복수급자 대상의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재정사업의 지방 우대와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사업 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였다. 아울러, 포괄 보조 규모를 2025년 3.8조 원에서 2026년 10.6조 원으로 3배 정도 확대하였으며, 지역적 사업 74개를 포괄 보조로 이관하였고, 지방 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를 위한 1조 원 투자재원 추가 배분하였다. 성과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 방식을 개편하였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소규모 수탁과제(1,877개, 4,685억 원)에 대한 지원 방식을 폐지하여 100개의 국가 대형 임무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3.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

이재명 정부의 첫 재정설계도는 2026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었다. 2026년도 재정설계도에 대한 의견을 붙이려 한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와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과제가 중첩된 재정설계도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간의 재정 운영이 가져온 경기 대응의 오류가 단시일에 고쳐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의 둔화, 세수의 축소, 내수 경제의 축소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26년의 경제 성장은 2025년 하반기의 회복세가 이어져 성장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KDI 2025년 8월 전망은 2025년 0.8% 성장, 2026년 1.6%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동시기 전망에 따르면, 2025년 0.9%, 2026년 1.6% 성장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복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 국내 성장 동력의 축소, 저출산 고령화 및 불균형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그리고 미국발 관세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및 이란 등으로 나타나는 국제 정세 급변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성패는 재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야만 세수 기반을 확장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략적 국가론(Strategic State)에 기반한 신산업정책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26년도 총수입 675.2조 원, 총지출 727.9조 원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재정 투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국가총력전으로 해석될 정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중심의 사업의 선정과 조정이 있지만, 부처들의 고유 사업들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분할주의에 기반한 사일로 효과(Silo Effect)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지원 예산이 10.1조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약 4조 원 이상이 증액되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1조 원 예산 투자와 함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으로 1.1조 원 규모로 예산이 투입된다. 정책 펀드의 중복성과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그리고 다수 부처의 AI 기술 개발과 연구 기반 조성 사업, 각 부처의 공공 AX 사업들과 다양한 AI 인력개발 사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고유 섹터를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형 사업들의 효과적 추진,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실효적인 인력 양성 사업의 마련, AI 지원사업 내부에서의 지속적 지출구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6년 예산은 그간 재정 운용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향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의도적인 것과 부수적인 효과가 결합된 허물어진 세수 기반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심각한 난관을 제공하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화의 요구는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에 의한 세수 기반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 총력전과 같은 AI 중심의 기술기반 확충과 사회 전환을 위한 투자의 성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AI 등 기술 중심의 경제와 사회가 가져오게 되는 산업과 사회의 대전환을 대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재정은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5. 12.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 8.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5. 9.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하여 국회 의결 확정』 보도자료, 2025. 12. 2.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언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선택과 과제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조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초혁신 경제 구현



5급 3특 체제 전환을 통한
균형성장, 양극화 극복



마중물에서 샘물로
회복 모멘텀의 구조적 성장



신뢰성 높은 예산편성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성장



I. 서론: 대내외의 도전적 상황에 맞선

대한민국 경제의 기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서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미중 경제 갈등, 보호주의 확산, 기술 패권 경쟁의 가속화라는 대외 환경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위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자분형성은 정책 상태에 있고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장기적 도전과제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투자 위축, 금융시장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누적이라는 3종의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과 연관되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고 있어 통화정책이 제약에 걸려있다는 사실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작동이 제한된 통화정책을 보완해야 하기에 재정정책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범 직후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2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며,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였다. 다음에서는 해당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2026년 정부 경제성장 전략: 네 가지 기둥

1. 거시경제 적극 관리: 경기 회복의 토대 마련

정부가 2026년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첫 번째 기둥은 거시경제의 적극적 관리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총지출 8.1% 증가), 공공기관 투자 확대(66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4조 원 증대), 정책금융 공급 확대(633.8조 원)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연장, 전기차 전환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역대 최대 규모 공급(54.4조 원)과 같은 정책들은 시장의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부처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먹거리 등 생활물가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공급 조절을 넘어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생산성 제고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지향한다.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에너지·교통·통신·돌봄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한국의 성공 공식을 업그레이드한

산업 육성 전략: 초혁신 경제의 구현

2026년 전략의 핵심은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이는 단순히 경기 회복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 육성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제조+팹리스),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기존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립과 금융·재정·세제·규제·R&D·인재 등 전방위적 지원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초혁신 경제 구현'이라는 비전이다. 정부가 선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한국의 기존 성공공식을 미래형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민관이 함께 공진하는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연구조직 설립 및 국산 NPU 활성화, 퍼지컬 AI 선도 분야 집중 지원 등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녹색 대전환(GX) 역시 중요한 축이다. K-GX 전략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 재설계, 산업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 지원은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R&D 투자의 구조적 혁신도 더해졌다.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R&D 예

산을 확대하고('26년 35.5조 원), 임무중심 R&D(K-문샷 프로젝트)와 도전형 R&D를 신설한 것은 혁신의 질과 파급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3. 국민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 모두의 성장 지원

세 번째 기둥은 국민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지방주도 성장전략,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벤처·창업 활성화 등은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계를 지향한다.

특히 5극(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과 3특(강원, 전북, 제주) 지역의 성장엔진 구축, 메가특구 도입, 지방 AX 가속화, RE100 산단 조성 등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동시에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 국내 여행 활성화, 그리고 최초의 지방 차등 우대제도까지 전개하고 있다.



4. 대도약 기반 강화: 제도와 구조의 전환

마지막 기둥은 대도약 기반 강화다. 규제개혁, 적극적 국부창출(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그리고 재정 등 구조혁신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 AI 학습데이터 구매비용의 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은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자 신호탄이다.

Ⅲ. 마중물에서 솟아나는 샘물: 민생 회복과 구조적 성장의 전환점

2025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용사면, 경기부양 정책들은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경제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을 때, 가계의 구매력을 직접 자극하고 내수 기반을 다시 살리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소매판매는 1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숙박·음식점업 생산 역시 반등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2026년의 전략은 이러한 회복의 모멘텀을 진정한 구조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AI 혁신, 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진짜 '샘물'을 길어올릴 차례가 온 것이다. 마중물이 펌프의 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지하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퍼올릴 수 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은 마중물의 시간에 이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여 성장의 샘물을 뿜어내도록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IV. 예산안으로 뒷받침되는 경제 정책의 신뢰성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강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뒷받침이다. 이번 성장전략이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체계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적극적 재정정책의 규모가 명확하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이 8.1%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문별 초점 또한 선명하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R&D 투자와 규제개혁, 인재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성장 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고,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적 배려도 촘촘하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해외 주요 투자기관과 신용평가회사들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MSIM)나 피치(Fitch)와 같은 기관들은 한국의 AI 중심 초혁신 경제 전략을 기존 성공공식의 '발전적 재구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제조 강국의 위상을 AI와 혁신으로 재정의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도약을 향한 결단과 성찰, 그리고 성과

요약하자면, 2026년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투자, 양극화 극복을 위한 균형성장, 그리고 대도약 기반 강화는 광복 10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산을 재형성하려는 담대한 구상이다.

특히, 예산안으로 뒷받침된 성장전략은 높은 실행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국제 투자기관들의 긍정적 평가는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경직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 경제는, 정책의 신속성과 현실감각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한 재정 투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운용의 핵심 기조는 '성과 중심'이다. 어

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재정지출이 목표한 정책 효과를 달성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쓰기로 했으면 제대로 써야 한다는 원칙 아래, 투입된 예산이 마중물을 넘어 진짜 샘물을 길어 올리는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집행 단계에서의 누수 없는 관리와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경제의 대도약이 단순한 성장 수치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긴 여정에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 튼튼한 첫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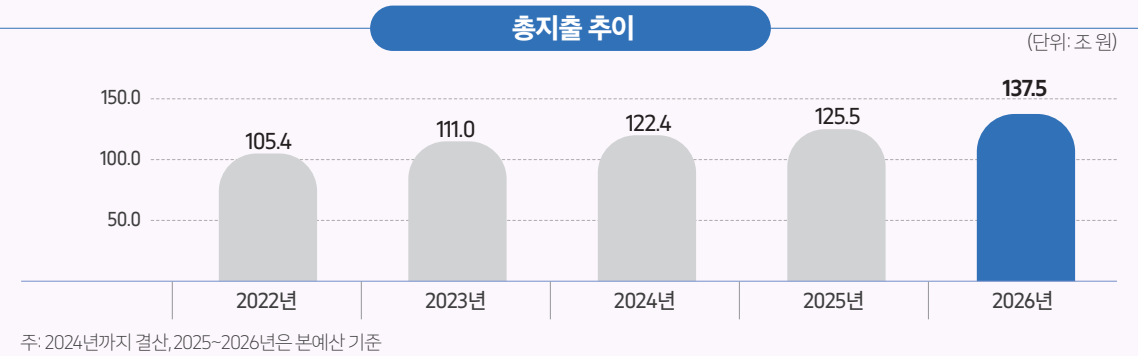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보건복지부

임무: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비전: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총지출 137.5조 원 중 성과관리 대상 134.6조 원* (97.8%)
*2026년 예산안 기준(최종 성과관리 대상은 추후 확정 예정)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조 원, 개수)

구분	내용	2026년 예산안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7.4	20.3%	5
전략목표 II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16.4	12.2%	6
전략목표 III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0.7	0.5%	7
전략목표 IV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90.2	67.0%	6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보건복지부
대표 성과지표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

상대적 빈곤율

정의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 내 빈곤인구의 규모)

선정 사유

빈곤 해소를 위해 빈곤층을 타겟팅하여 빈곤층의 규모를 줄이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지표 설정

지표 추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	14.9	15.0	14.9	15.0
실적	14.8	14.9	14.9	15.3 ¹⁾	-	-

주 1): '21~'23년 실적치는 '26년 성과계획서에 기반하며, '24년 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를 참고함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정의

건강검진 대상자 중 수검한 인원 비율

선정 사유

국민의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 실천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선정

지표 추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69.3	70.4	71.5	70.9	71.1
실적	72.6	69.8	69.8	70.8	-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정의

노인인구 중 노인돌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이용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비율

선정 사유

급속한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전예방적 돌봄·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장기요양기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지표 추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	29.4	30.3	34.0	35.3
실적	28.8	29.4	30.3	32.7	-	-

보건복지부

우수 프로그램

'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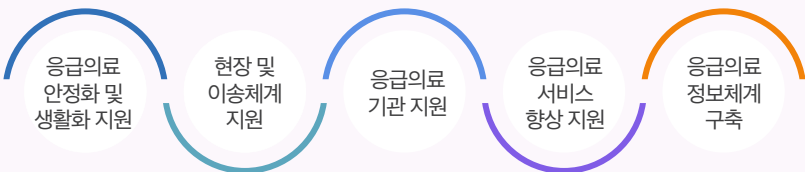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응급의료 체계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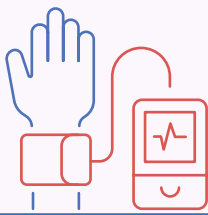
- 프로그램 목표**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 선정 사유**응급의료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적절하며, 특히 현장 응급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등 성과 개선 노력이 우수

주요 추진 전략



프로그램 예산규모 ('26년 예산안)	성과지표	'24년도 목표치	'24년도 실적치	달성률
4,468억 원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91.8%	92.3%	100.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프로그램 목표**보건의료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등 확산을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내실화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 선정 사유**매년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 의료연구 결과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되고 있음

주요 추진 전략



프로그램 예산규모 ('26년 예산안)	성과지표	'24년도 목표치	'24년도 실적치	달성률
3,478억 원	보건의료연구 정책연계 실적	12.4건	12.7건	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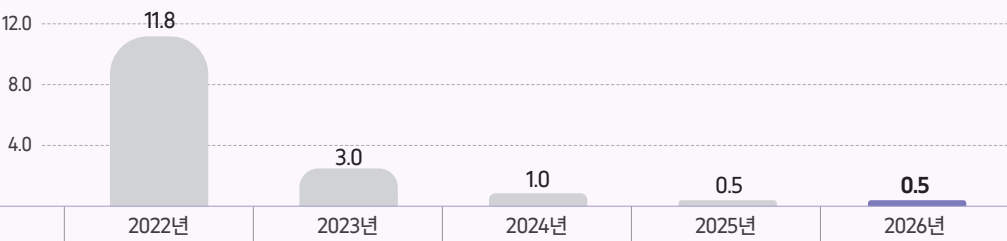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질병관리청

- 임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 비전:**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2024년까지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0.5조 원 중 성과관리 대상 1.1조 원*(218.8%)

*2026년 예산안 기준(최종 성과관리 대상은 추후 확정 예정)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단위: 억 원, 개수)

구분	내용	2026년 예산안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951	8.3%	2
전략목표 II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위험 최소화	7,495	65.6%	5
전략목표 III	고령화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633	5.5%	1
전략목표 IV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2,350	20.6%	1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질병관리청

대표 성과지표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

주요 만성감염병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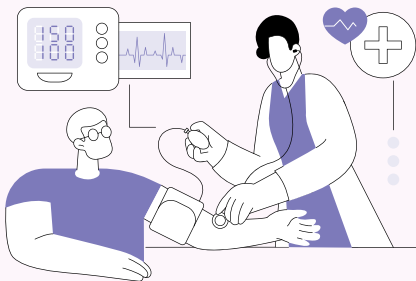


- 정의** 만성감염병은 감염병 신환자 발생부터 전파 차단, 치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을 의미하며, 퇴치 수준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을 보호
- 선정 사유** 주요 퇴치 가능 감염병의 사망자 수를 파악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조기 진단 및 지속 치료 등을 통해 만성감염병 퇴치를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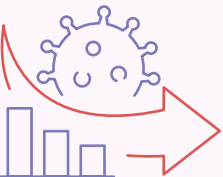
지표 추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	1,892	1,704	1,696	1,692
실적	1,975	1,755	1,766	-	-	-

(단위: 명)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 정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30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 선정 사유** 유병률은 건강상태를 평가하거나 질병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건강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음

지표 추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	-	-	52	51.3
실적	51.5	51.9	52.7	51.2	-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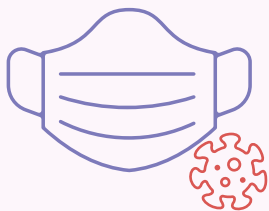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우수 프로그램

'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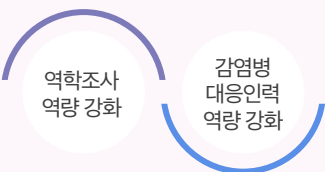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감염병위기
대응



- 프로그램 목표** 질병 데이터 기반 분석·연구,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선정 사유**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 감지 및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전략목표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임

주요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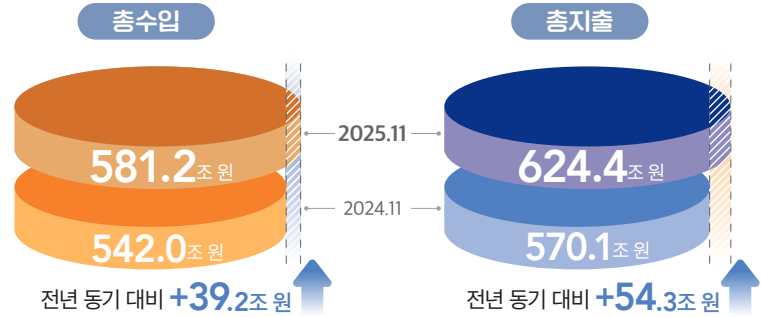
프로그램 예산규모 ('26년 예산안)	성과지표	'24년도 목표치	'24년도 실적치	달성률
616억 원	감염병전문콜센터 (1339) 만족도	90.0%	95.5%	1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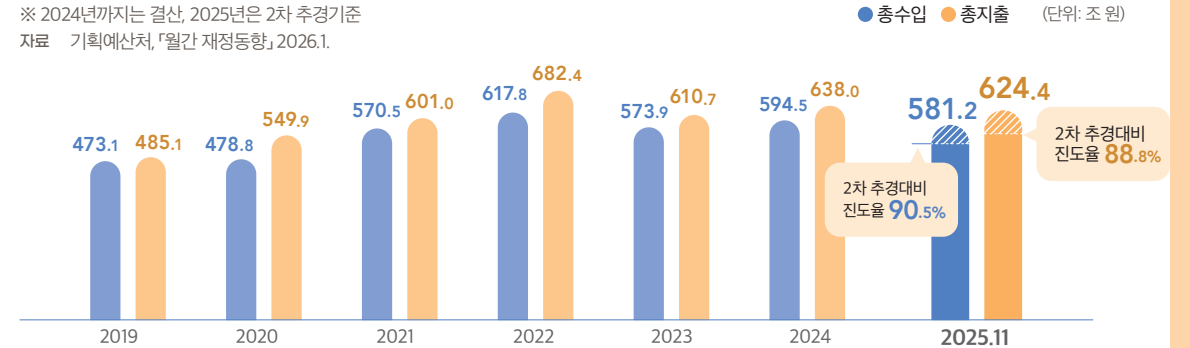
재정동향

2025년 11월(누계) 기준

총수입·총지출



※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2차 추경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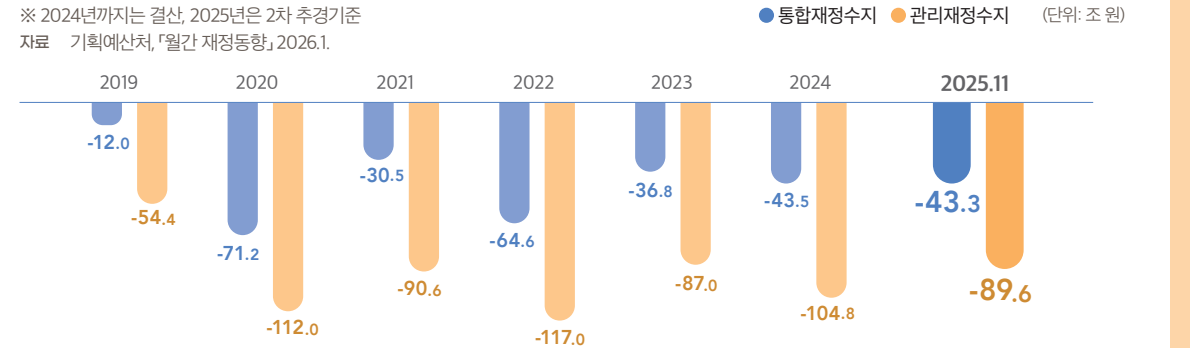


재정수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주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주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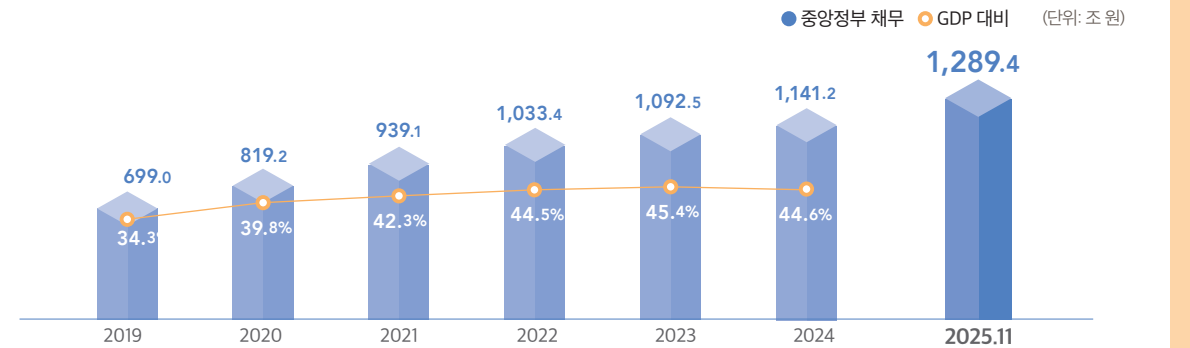
※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2차 추경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국고채무



주 1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집행 기준
 주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주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주 4 구성항목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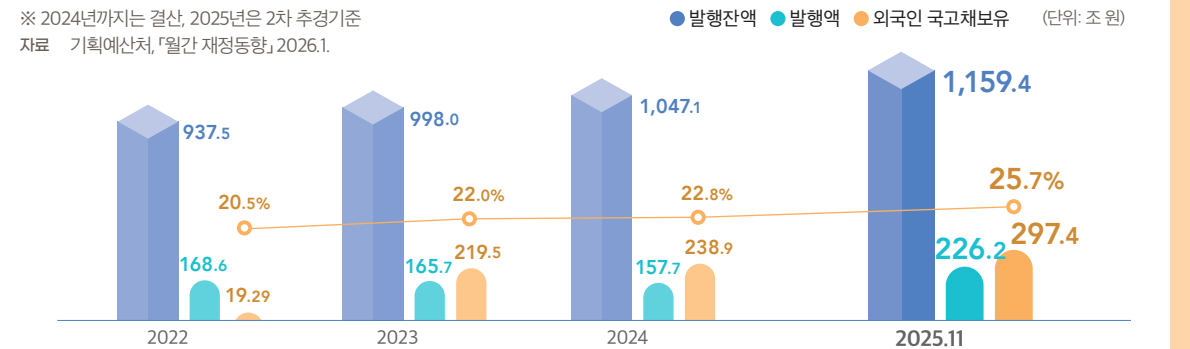


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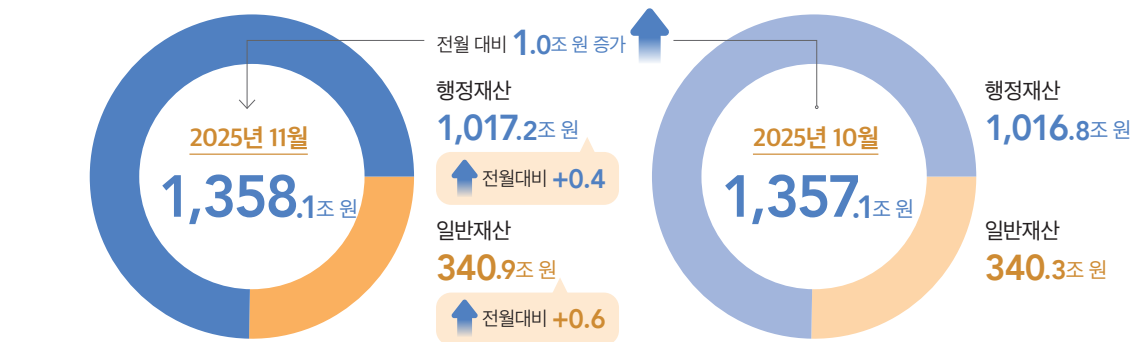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1.2조 원 포함시 227.4조 원
 주 2 25년도 누적 발행액 비율 : 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한도액 231.1조 원 대비 비율
 주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2차 추경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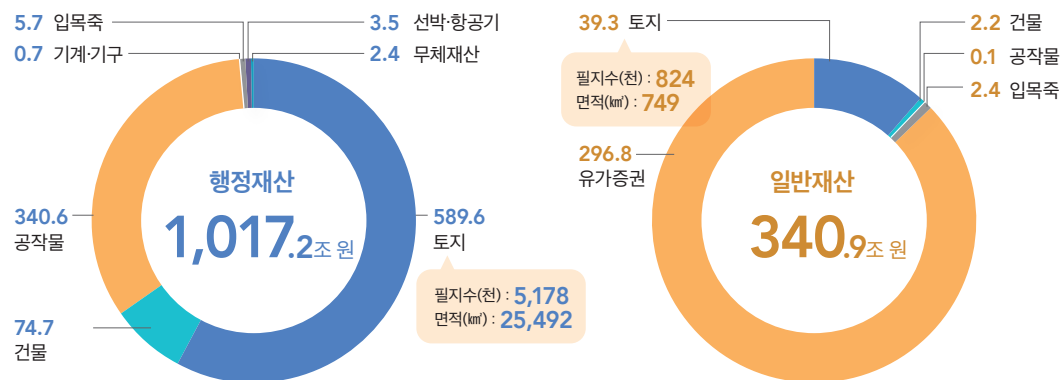


국유재산

국유재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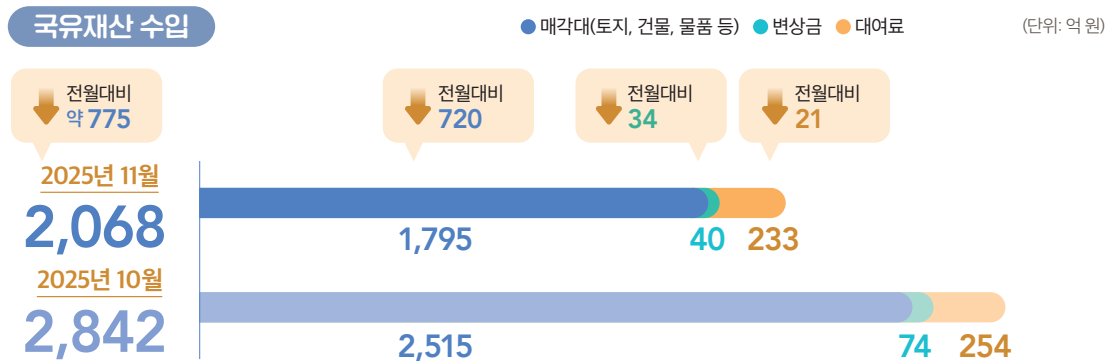


주 1 행정재산 :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예시 :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주 1 2024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PP.16~21), 2025년 자료는 잠정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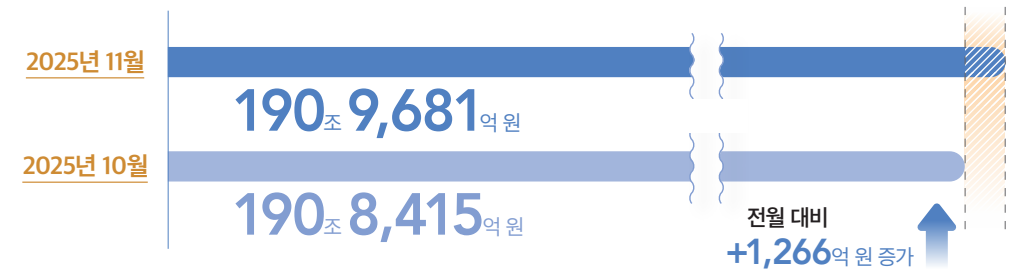
국유재산 수입



주 1 2024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25년 자료는 잠정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정부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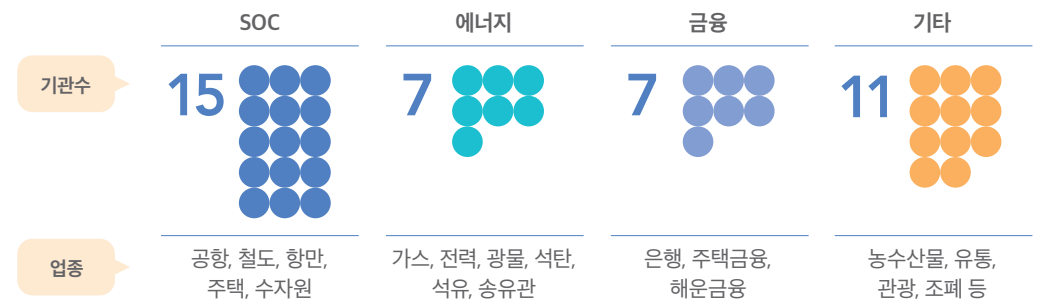
정부출자금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0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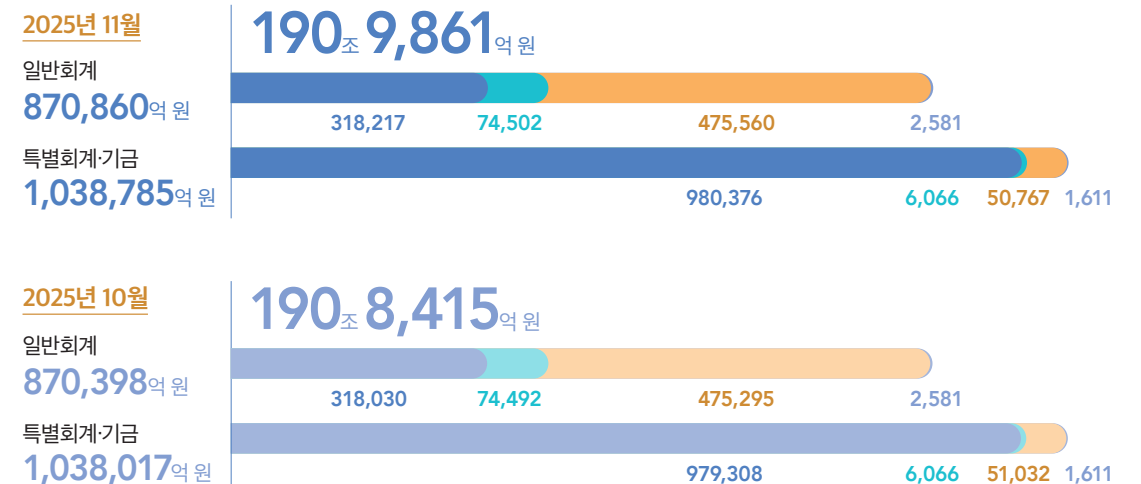
(단위: 개)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1.

주요국 월간 재정 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2개월 차)	규모	7,403억 달러	1조 1,980억 달러	4,577억 달러 적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1%	13.2%	-20.3%
독일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3,691억 유로	4,425억 유로	734억 유로 적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8%	6.2%	-45.4%
일본 10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33조 3,764억 엔	69조 367억 엔	35조 6,603억 엔 적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5%	-0.3%	13.3%
프랑스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3,317억 유로	4,687억 유로	1,370억 유로 적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9%	7.1%	-8.2%
영국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7,651억 파운드	8,974억 파운드	1,323억 파운드 적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9%	7.1%	-8.2%

**자료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November 2025(12.31.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November 2025(12.23.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12.19 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au 30 novembre 2025(1.13.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November 2025(12.19. 발표)

대한민국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581.2조원	624.4조원	43.3조원 적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9%	1.4%	1.6%

**자료 :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1월호

해외재정동향 (1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FOMC 금리인하 및 정책결정 조치 공표
- 노동통계국,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025년 11월) 공식 발표
- 노동통계국, 미국 고용동향(2025년 12월) 정기 발표

02 독일

- ifo, 12월 기업체감지수 하락(전월 88.0 → 87.6), 기업 심리 악화 시사
- 독일 경제인 단체, 독일 내 기업 파산 급증에 대한 우려 표출

03 영국

- 영란은행, 12월 통화정책위원회 결과 기준금리 인하 결정(4.00% → 3.75%)

04 프랑스

- 통계청,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CPI, 2025년 11월) 발표
- 중앙은행, 12월 거시경제전망 공개

05 일본

- 일본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단기 정책금리 0.75% 인상
- 총리, 차기 예산에서 재정규율 강조,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 완화 노력

06 중국

- World Bank, 중국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 인민은행(PBoC), 2026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의지 표명(유동성 지원)

국제기구

01 EU

- 유럽 중앙은행, 유로존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 발간

02 OECD

- G20 국가 2025년 3분기 GDP 성장을 발표

주요국
동향12.10. | FOMC 금리인하 및 정책결정 조치 공표¹⁾

- 연방준비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2025년 12월 10일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3.50~3.75%로 25bp 인하할 것을 결정
 - 이번 정책금리 25bp 인하 결정은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회 연속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판단을 유지한 결과
 - 또한, 지급준비금 감소 판단에 따라 지급준비금 수준 유지를 위해 월 \$400억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매입은 시황과 준비금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
- 9월 대비 12월 FOMC 경제전망 확인 결과, 2026년도 경제성장률은 상향,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하향, 실업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을 유지²⁾
 - 2026년 경제성장률 상향(1.8→2.3%),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하향(2.6→2.4%) 및 근원 PCE 하향(2.6→2.5%), 실업률 전망(4.4%)
- FOMC의 정책 결정이 신중한 완화 기조로 평가됨에 따라 주가 상승과 국채금리 및 달러 가치 하락을 견인, 시장은 연준의 자산 매입 개시를 예상보다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12.18. | 노동통계국,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025년 11월) 공식 발표³⁾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은 2025년 12월 18일 'CONSUMER PRICE INDEX-NOVEMBER 2025'를 공표
 - * CPI는 대표 소비자물가 지표로, 통화정책(특히 향후 금리 경로 기대)과 실질임금·소비 여력 판단과 연관
-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2.7%로 전문가 전망치(3.1%)와 지난 9월 CPI 상승률 3.0%를 하회
- 근원 CPI는 2.6% 상승 하였으며, 9월의 3.0%보다 둔화되어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및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짐
- 한편, 10월 CPI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섯다운으로 인한 정부 예산 공백으로 데이터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으며, 월간 CPI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최초 사례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1210A1.PDF](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1210A1.PDF)
 2)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2025.12.10.), P.2
 3)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26.1.9. | 노동통계국, 미국 고용동향(2025년 12월) 정기 발표⁴⁾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은 2026년 1월 9일 'Employment Situation (고용동향)' 2025년 12월분을 발표
 - * 고용동향은 비농업 고용, 실업률 등 노동시장 핵심지표를 제공하며, 경기 국면 판단, 통화정책 기대 등을 강하게 좌우
- 1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5만 명 증가하였으며, 시장 예상치 6만 명 증가, 전월 5.6만 명 증가보다 상승 폭이 줄어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함
 - 업종별로는 건설업, 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발생
- 반면, 실업률은 4.4%로 전월 4.5%에 비해 0.1p 감소하여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전월 3.6%보다 0.2p 확대
 - * 11월 실업률은 BLS가 당초 발표한 4.6%에서 4.5%로 하향 조정

12.17. | ifo, 12월 기업체감지수 하락(전월 88.0 → 87.6), 기업 심리 악화 시사⁵⁾

- 독일의 ifo 연구소는 2025년 12월 17일 ifo 기업체감지수(ifo Business Climate Index)를 발표
 - * 기업체감지수는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업 심리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독일 실물경제의 선행지표로 폭넓게 활용
- 12월 ifo 기업체감지수는 87.6으로 나타나 전월 88.0 대비 0.4p 하락, 현상형지수(Assessment of business situation)는 85.6으로 전월과 동일하나, 기대지수(Business Expectation Index)가 전월 90.5에서 89.7로 소폭 하락하여 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무역, 서비스업 등에서 기대지수 하락이 두드러졌고, 건설업도 기업체감지수의 흐름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금리 환경의 지속, 수요 회복 지연, 에너지·비용 부담이 기업 심리에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으며, 다수의 독일 기업이 2026년 상반기 등 미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

4) [HTTPS://WWW.BLS.GOV/SCHEDULE/NEWS_RELEASE/EMPSIT.HTM](https://www.bls.gov/schedule/news_release/empsit.htm)
 5) [HTTPS://WWW.IFO.DE/EN/FACTS/2025-12-17/IFO-BUSINESS-CLIMATE-FALLS-DECEMBER-2025](https://www.ifo.de/en/facts/2025-12-17/ifo-business-climate-falls-december-2025)

26.1.12. | 독일 경제인 단체, 독일 내 기업 파산 급증에 대한 우려 표출⁶⁾

-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은 독일 내 기업 파산이 최근 11년 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독일 상공회의소(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 DIHK)의 경고를 보도하며 독일 정부의 즉각적 구제 정책 없이는 완화 기미가 없음을 경고
 - 독일 지방법원 10월 기업 파산 등록 건수 2,108건(전월 대비 4.8% 증가), 12월 예측치는 전년도 12월 대비 15.2% 증가 예상
- 고금리 환경, 비용 부담, 수요 약화 등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면서 파산 위험이 증가
- 기업 파산 증가는 고용 조정과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어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실채권 위험, 지역경제 충격 등 금융 이슈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향후 독일 성장 전망과 유로존 경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2.18. | 영란은행, 12월 통화정책위원회 결과 기준금리 인하 결정(4.00% → 3.75%)⁷⁾

-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이하 MPC) 결과에 따라 기준금리를 4.00%에서 3.75%로 0.25p 인하 결정
 -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 위원 중 금리인하 지지(3.75%) 5명, 금리동결 지지(4.00%) 4명
- MPC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노동 등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근거를 마련
 -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1월 예상치보다 낮은 0.1%로 둔화, 4분기 성장률은 0.0%로 전망
 - 10월까지 누적된 3개월간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0.2% 상승한 5.1%로 확인,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3.6%) 대비 0.4p 하락한 3.2%로 완화
 - 관세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외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감소

| 영국의 2025년도 기준금리 인하 현황 |

2025년	1차 인하	2차 인하	3차 인하	4차 인하
	-2월 6일	5월 8일	8월 7일	12월 8일
금리(%)	4.75→4.50	4.50→4.25	4.25→4.00	4.00→3.75

*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5. 12. 18.

6)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BUSINESS-LOBBY-RAISES-ALARM-OVER-HIGHEST-NUMBER-BANKRUPTCIES-11-YEARS-2026-01-12/](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business-lobby-raises-alarm-over-highest-number-bankruptcies-11-years-2026-01-12/)7)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5/DECEMBER-2025](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5/december-2025)12.12. | 통계청,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CPI, 2025년 11월) 발표⁸⁾

-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약 0.9p 상승했으며, 전달보다 0.2p 소폭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은 운송업의 계절적 하락(6.2% → 5.4%), 제조업 가격 하락(0.2% → -0.1%)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 하락(-0.5%)을 반영
 - 반면, 에너지 가격은 반등(-0.4% → 1.3%), 담배, 식품 등은 경미한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정세
- 또한, 전년 동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는 10월 1.2%에 이어 11월은 1.0%를 기록했으며, 서비스 가격은 10월 2.4% 상승에 이어 11월은 2.2% 상승하여 상승폭이 둔화

12.23. | 중앙은행, 12월 거시경제전망 공개⁹⁾

-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2025년 12월 23일 '프랑스 12월 거시경제전망'을 공개
 - * 거시경제전망은 성장률과 HICP(조화물가지수) 경로를 포함해 중기 시점의 거시 경제 시나리오를 제시
 - 중앙은행의 거시경제전망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운용, 민간의 투자·고용 계획, 금융시장의 금리·환율 기대 형성에 근거 자료로 활용
- 전망에 따르면 2026년 프랑스 GDP 성장률은 0.9%, 2027년은 1.3%로 제시
 - 소비자물가조화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는 2025년 2.5% → 2026년 2.1% → 2027년 1.9%로 점진적 감소하는 둔화 경로 제시
 - * HICP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비교를 위해 유로스탯(Eurostat)과 각국 통계기관이 통일된 방법을 적용하여 조화롭게 산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
 - 실업률은 2025년 7.7%에서 2026년 소폭 상승한 뒤 2027년 7.4%로 하락하는 경로를 제시
- 중앙은행은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와 임금 상승 압력이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
- 프랑스 경제가 저성장·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681587](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681587)9) [HTTPS://WWW.BANQUE-FRANCE.FR/EN/NEWS/MACROECONOMIC-PROJECTIONS-DECEMBER-2025](https://www.banque-france.fr/en/news/macroeconomic-projections-december-2025)



12.19. | 일본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단기 정책금리 0.75% 인상¹⁰⁾

- 본은행(Bank of Japan)은 2025년 12월 19일 통화정책회의 결과로 정책금리와 포워드 가이드스*를 유지하며, 통화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의 변화가 없음을 발표
 - * 포워드 가이드스 :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 다만,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할 것을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결정(12. 22 적용)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2%)의 지속적·안정적 달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상당 폭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설명해 마이너스 금리정책 조기 종료 관측을 경계하며, 완화적 금융 여건은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병행
 - 일본 경제의 최근 지표를 고려할 때, 임금과 물가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
- 장기간 이어진 급격한 통화완화 정책에서 정상화로 진행되는 과정은 엔화·국채금리·주식시장에 직접 파급될 여지가 있으며, 일본 내 임금·물가 선순환(임금 인상 지속 가능성)이 향후 추가 인상 여부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 가능할 것으로 전망

12.25. | 총리, 차기 예산에서 재정규율 강조,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 완화 노력¹¹⁾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각 관료들에게 차년도 4월에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부채 의존도를 제한하여 재정 규율을 유지할 것을 강조
 - 차년도 예산은 총 122.3조 엔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나,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6조 엔으로 제한하여 2년 연속 30조 엔 이하를 유지할 계획
- 부채의존도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24.2%까지 낮추어, 재정규율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보장 하면서 강력한 일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어갈 것을 선언
-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의 별도 연설에서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규모에만 의존하는 무분별한 지출 확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지출을 의미함”을 언급

10) [HTTPS://WWW.BOJ.OR.JP/EN/MOPO/MPMDEC/MPR_2025/K251219B.PDF](https://www.boj.or.jp/en/mopo/mpmdec/MPR_2025/K251219B.PDF)

1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PM-STRESSES-FISCAL-DISCIPLINE-NEXT-YEARS-BUDGET-WITH-LOWER-DEBT-RELIANCE-2025](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pm-stresses-fiscal-discipline-next-years-budget-with-lower-debt-reliance-2025)



12.11. | WORLD BANK, 중국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¹²⁾

- 세계은행(World Bank)은 Advancing Reforms Enhancing Prospects를 통해 기존 4월 발간 보고서 대비 중국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을 4.9%로 조정
 - 이는 2025년 4월 보고서 4.0% 대비 0.9p 상승한 수치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인한 내수경제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조정임
- 반면, 2026년 성장률은 주택과 노동시장 악화에 따른 가계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한 4.4%로 전망하여, 2025년 대비 낮은 성장 전망을 예상
 - 부동산 수익 악화, 지방정부 긴축 재정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 둔화 등을 고려

26.1.6. | 인민은행(PBOC), 2026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의지 표명(유동성 지원)¹³⁾

- 중국인민은행은 2026년에 지급준비율(RRR)과 금리인하를 통해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중국인민은행은 12월 중국 내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의 약속을 반영하여 경기 대응 및 경기순환 간 조정 강화, 내수 활성화, 공급 개선, 금융위험 완화 등 안정적 성장 지원을 통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시작을 공표
-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7개월 연속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하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표명
- 중국인민은행의 발표는 경기부양과 금융여건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신호로, 기업·가계 신용,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 관리로 해석되며, 환율 안정 등은 향후 자본흐름과 대외금융 위험관리를 통한 국채금리, 대출금리, 신용스프레드 동반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



12) WORLD BANK, ADVANCING REFORMS CAN ENHANCES PROSPECTS - CHINA ECONOMIC UPDATE(2025. 12. 11)

1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CENTRAL-BANK-PLEDGES-CUT-RRR-INTEREST-RATE-2026-2026-01-06/](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central-bank-pledges-cut-rrr-interest-rate-2026-2026-01-06/)

국제기구
동향12.3. | 유럽 중앙은행, 유로존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 발간¹⁴⁾

- 유로지역 경기 회복세는 완만하지만 예상보다 견조하며, 물가는 목표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시나리오를 전망
- (성장 전망) 실질 GDP는 2025년 1.4%, 2026년 1.2%, 2027~2028년 1.4%로 예상, 9월 전망 대비 전 구간에서 소폭 상향 조정
 - 주요 성장 동력은 임금·고용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및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한 국방·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순수출 기여도는 2027년 이후부터 0으로 개선될 예정
- (물가·임금 전망) HICP 지수는 2025년 2.1%, 2026년 1.9%, 2027년 1.8%까지 하락 후,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 효과 등으로 2028년 2.0%로 다시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2025년 2.4%에서 2028년 2.0% 수준으로 둔화, 임금상승률은 2025년 4.0%에서 2026년 3.2%, 2027년 2.9%로 둔화된 뒤 약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
- (국제 환경, 교역) EU 외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3.5%에서 2026년 이후 3.3% 수준까지 다소 둔화되나, 9월 대비 미국, 중국의 성장률 상향과 미·중 관세 완화로 소폭 상향 조정
 - 미·중 관세 인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완화적 금융여건으로 유로지역 대외수요도 2025년 3.8%에서 2026년 1.9% 후 2027~2028년 3%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과 기후정책) 유로지역 재정수지는 2025년 -3.0%에서 2026~2028년 -3.3~-3.5% 수준으로 다소 악화,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4년 86.6%에서 2028년 89.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
 - 독일 중심의 국방·인프라 투자, 경제회복기금(NGEU) 관련 투자 등으로 2026년 재정여건 완화후, 2027~2028년에는 점진적 긴축이 재개되나, 완전한 부채 안정은 전반적으로 불가능
- (기후정책 및 리스크) 국가별 탄소세·녹색 재정 등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유로존 거시경제 영향은 기본 시나리오상 성장, 물가에 연 0.1%p 이내의 작은 효과로 반영
 - 다만, 2028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배출권거래제(ETS2)는 유로존 지역 주요 인플레이션을 약 0.2% p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 탄소 가격 수준과 제도 보완 여부 등에 따라 상·하방 위험이 존재

14) EUROSISTEM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DECEMBER 2025), [HTTPS://WWW.ECB.EUROPA.EU/PRESS/PROJECTIONS/HTML/ECB.PROJECTIONS202512_EUROSISTEMSTAFF~12EAD61977.EN.HTML](https://www.ecb.europa.eu/press/projections/html/ecb.projections202512_eurosistemstaff~12ead61977.en.html)

12.15. | G20 국가 2025년 3분기 GDP 성장을 발표¹⁵⁾

- G20 국가 중 자료가 가용한 16개국의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혼재 양상을 보임
 - * 이번 발표의 마감일 기준으로 미국의 2025년 3분기 GDP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 시계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G20 국가와 OECD 회원국 집계에서 미국을 제외¹⁶⁾
 - 2025년 2분기 대비 3분기 GDP 성장률은 상승 7개국, 하락 7개국, GDP 감소 2개국으로 확인
 - G20 국가들의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의 0.7%에서 소폭 상승한 0.8%(잠정치)를 기록(표 참조)
- 캐나다의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 -0.5% 대비 3분기 0.6%까지 강하게 반등하였으며,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도 2분기 -0.1%에서 3분기 0.1%로 전환
- 2025년 3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 0.7%에서 1.3%로 크게 상승하였고, 프랑스(0.3%→0.5%)와 인도(1.8%→2.0%), 중국(1.0%→1.1%)의 GDP 성장률은 다소 완만하게 상승
- 반면, 다른 G20* 국가들은 3분기에 2분기 대비 성장 둔화 또는 감소를 경험
 - 일본의 GDP는 0.6%, 멕시코의 GDP는 0.3%만큼 감소
 - 사우디아라비아(1.9%→1.4%), 튀르키예(1.6%→1.1%), 남아프리카(0.9%→0.5%), 호주(0.7%→0.4%)의 GDP 성장이 둔화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영국은 소폭 둔화(원문의 표 참고)

| G20 국가의 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백분율 변화, 계절조정 자료) |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4분기	1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G20*	0.6	0.5	0.7	0.6	0.8	0.8	0.8	0.7	0.8
OECD*	0.0	0.2	0.4	0.3	0.5	0.4	0.5	0.4	0.3
EU	0.1	0.1	0.3	0.3	0.4	0.5	0.5	0.3	0.4
유로지역	0.0	0.1	0.3	0.2	0.4	0.4	0.6	0.1	0.3
중국	1.6	0.8	1.3	1.0	1.5	1.5	1.2	1.0	1.1
프랑스	0.2	0.4	0.1	0.2	0.4	0.0	0.1	0.3	0.5
독일	0.0	△0.3	△0.1	△0.3	0.0	0.2	0.3	△0.2	0.0
이탈리아	0.0	0.2	0.1	0.2	0.0	0.2	0.3	△0.1	0.1
일본	△1.4	0.4	△0.5	0.2	0.7	0.3	0.4	0.5	△0.6
한국	0.8	0.5	1.2	△0.2	0.1	0.1	△0.2	0.7	1.3
영국	△0.2	△0.3	0.8	0.6	0.2	0.2	0.7	0.3	0.1
미국	1.2	0.8	0.2	0.9	0.8	0.5	△0.2	0.9	..

주: 1. 러시아의 GDP는 2021년 4분기 이후 신뢰할 만한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아 G20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G20 총계는 가중치를 조정함.
2. G20* 합산 수치는 아프리카 연합(THE AFRICAN UNION)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GDP GROWTH SHOWS A MIXED PICTURE ACROSS G20 COUNTRIES IN THE THIRD QUARTER OF 2025", TABLE 1, P2, 2025.12.15.

15) OECD, "G20 GDP GROWTH SHOWS A MIXED PICTURE ACROSS G20 COUNTRIES IN THE THIRD QUARTER OF 2025", 2025.12.15,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12/G20-GDP-GROWTH-THIRD-QUARTER-2025.HTML](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12/g20-gdp-growth-third-quarter-2025.html)

16) 미국의 2025년 3분기 GDP 자료는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일정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에 발표될 예정. 2024년 자료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는 G20 GDP의 19.3%, OECD GDP의 34.1%를 차지함.

01

2026 January



| 재정 |



기획예산처 출범 (기획예산처, 1.2)

-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18년만에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어 공식 출범
- 2008년 통합되었던 기획재정부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을 단행
-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등 기획부문과 예산편성 및 관리, 공공기관 관리 등 기능을 수행



2027년 예산안 편성 작업 착수 (기획예산처, 1.8)

- 기획예산처는 1월 8일(목) '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 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
-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하여 전략적 자원 배분 강화를 시도
-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발굴~구체화~반영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선정한 아젠다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
-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중기관점의 지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할 계획

| 경제 |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가데이터처, 25.12.31)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
- 전월대비 전기·가스·수도는 변동이 없고, 서비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이 상승하여 전체 0.3% 상승
- 전년동월대비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2.3%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3.3%, 식품이외는 2.4% 각각 상승
-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2.1%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9%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대비 2.2%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0.6% 하락

1월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 재정 |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 재정 |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 재정 |

-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저출생 시대, 세제로 양육 부담을 덜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로 수년간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소득세제도는 시대의 경제 환경과 사회적 과제를 반영해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2026년 개편되는 개인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과 낮은 실효세율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소득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2026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세제를 통해 어떤 가치를 우선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행정학과 교수



금융투자 소득 과세의 현황과 과제

세감경기는 여전히 겨울인데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 추세를 보여 KOSPI 지수가 작년 초 2,500 수준이던 것이 5,000선을 넘보고 있다. 당연히 기존의 주식 투자자는 물론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소득세 제도는 상장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 및 동일 소득 간 과세상 차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당초 계획에 대해 수년간 연기 또는 철회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제는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가속화, 증권거래세 축소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에 대한 우려로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비롯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증권거래세 등 자본이득 과세 전반에 걸친 정책의 비일관성이 오히려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비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식 소유자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해, 대주주 거래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의 손익 전반을 총소득에 합산해 누진적 종합소득 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자본자산의 양도차익은 분리과세하되, 장단기 양도손익 간에는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는데,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원화해 금융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개인소득 세제의 기본 구조와 과세 방식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을 정리해보자. 2026년은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구체적으로는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소득을 합치는 방식과 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소득은 합산해서 매년 5월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 발생 기간이 길어 한꺼번에 합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구분해서 과세된다.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8가지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산출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종합소득세의 경

우 먼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각각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산출된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분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6~4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되며, 결정세액에서 가산세와 미리 납부한 세액 등을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다. 2026년 기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세율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고소득자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얻은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활비 지출이 큰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인적공제를 제공한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그리고 이에 더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가 제공된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소득세는 주요국에 비해 최고세율과 누진도는 높은 편이나 세수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2022년 기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45%는 OECD

평균 36.1%보다 높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다. 이 기준점은 우리나라 1인당 GDP의 24배에 해당하며 OECD 평균인 5.9배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소득세 누진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6%,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세수비중은 낮은 편이다. 소득세 실효세율도 또한 낮은 편으로 자녀가 2명 있는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5.2%로 이는 OECD 평균인 1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¹ 우리나라가 높은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3년 33.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소득세 공제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이해

산출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중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세금을 깎아주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가 구분된다.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의 기본이 된다.

2010년대 이후 세 부담 강화의 조세정책 흐름은 소득공제에서도 나타났다. 2014년 소득공제 방식에 따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의 역진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자녀관련 소득공제(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그 외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 월 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2014년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일부 저소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면세자가 늘어났지만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증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²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녀 세액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연말정산 보완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1)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전액을 공제한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청약저축,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주택자금이 포함된다.

1.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2025.12
2. 김진석,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부담 차이 분석, 세무와 회계지널 17권 5호, 2016



-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총급여의 25% 초과분),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변화: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30%)가 신설되었다.

2)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액수만큼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공제하므로 형평성이 높다.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다.(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등)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의 12~15%를 공제한다.(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공제)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15% 공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등은 전액 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15% 공제)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10만 원까지 100%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불한 월세의 15~17%를 공제한다.

3) 주목해야 할 신설/확대 항목 (2024~2026년 적용)

-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 한정으로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산후조리원 비용: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제(2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26년 바뀌는 개인소득세 제도:

저출생 대응의 확대

2026년 소득세법 개정의 핵심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있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예: 자녀가 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50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 1인당 25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 상향)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 포함)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교생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3인 이상)의 경우 주택 면적이나 시가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소득세제:

투명성과 효율성의 강화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비과세, 소득공제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처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는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내므로, 국세수입 감소분을 ‘세금 예산’으로 취급하여 관리하며,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총규모는 80.5조 원이며 이 중 소득세 분야의 감면액이 49.5조 원으로 전체의 61.5%에 달한다. 특히 근로 및 자녀장려세제의 확대와 보험료, 의료비 특별공제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하여 감면 규모 1위 항목으로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공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026년 기준 2위 항목인 ‘연금보험료공제’ 역시 공제대상 인원과 감면액 증가에 따라 2024년에는 3위 항목이었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감면규모 2위 항목으로 집계된다. 한편, 2024년 실적치기준으로 20대 조세지출 항목에 속하지 않았던 ‘자녀세액공제’는 세법 개정에 따른 1인당 공제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에는 상위 20대 항목에 신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 정책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다. 작년 6월 이후 국내 증시의 글로벌 1위 상승률은 친 증시 정책, 미국 경제의 호조, 그리고 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만나 이룬 성과다.

반도체 경기가 한국 경제와 증시를 살린다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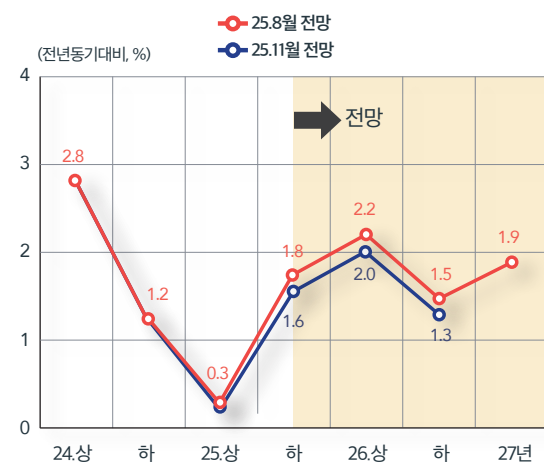
반도체 호황이 코스피를 이끌다

지난해 계엄, 탄핵, 정권 교체가 숨 가쁘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이 주도했던 코스피 상승률로 대변된다. 작년 6월 이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글로벌 증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증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 코스피 지수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작년 들어 내부적으로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1분기 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하고 코스피 상승률은 최하위로 추락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 목표 5,000을 제시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간 지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2배나 급등했다.

모든 정책은 수명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초점을 맞춘 1차 친증시 정책이 수명을 다할 무렵에

대외 여건을 개선해 코스피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2차 친증시 정책이 발표됐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6월에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MSCI) 지수 선진국 예비 명단에, 내년 6월 선진국에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은 60조 원 정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성장경로



자료 : 한국은행

글로벌 순풍, 미국 경제의 호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충격이 예상만큼 크지 않았던 점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세계 경제 대공황을 몰고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 지금까지 세계 무역 증가율은 5.8%,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내외로 부과 전에 비해 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부메랑 효과가 미국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호지부지, 즉 타코(TACO)가 될 확률도 높다.

미국 경제와 증시가 예상외로 좋았던 점도 한국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1분기에는 -0.6%까지 떨어지다가 3분기에는 4.3%까지 뛰어올랐다.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큰 AI와 관련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갔다. 올해 들어서도 재정과 통화정책 영역에서 경기와 증시 부양을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것이 친증시 정책일 뿐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해 3,500선 밑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까지 인정할 만큼 건전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미국보다 낮고 성장률은 작년 3분기의 경우 통계 방식을 같게 조정하면 우리는 5.2%로 미국의 4.3%보다 높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도 1,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 외적으로는 자칫 위기에 빠질 상황을 극복한 브레이크 아웃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작년 상반기 계엄, 탄핵,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현 정부 들어 정리되고 있다. 콘트를 타워 부재로 늦어졌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일본과 비교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고려돼 국익이 보다 많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서 빅 사이클로

산업별로는 반도체 경기가 좋았던 점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작년 초부터 공급 면에서 삼성전자가 추진한 감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인공지능(AI)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현재 반도체 경기는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seller's market)인 점을 고려하면 작년 이후 슈퍼 사이클 국면이 2027년 이후까지 연장되는 빅 사이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에 거론되는 빅 사이클론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도체 빙하기 우려까지 나왔던 2년 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이윤 감소'라는 공동 현안에 대해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정반대였다. 테슬라는 여섯 차례에 걸쳐 가격 할인 대책을 추진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대규모 감산 계획을 발표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이론적으로 기업이 이윤 감소를 극복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초기부터 매출과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격(Price) 할인'이다. 다른 하나는 초기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매출과 점유율이 회복되고 어느 순간에 이윤이 대폭 증가하는 수량(quantity) 축소, 즉 '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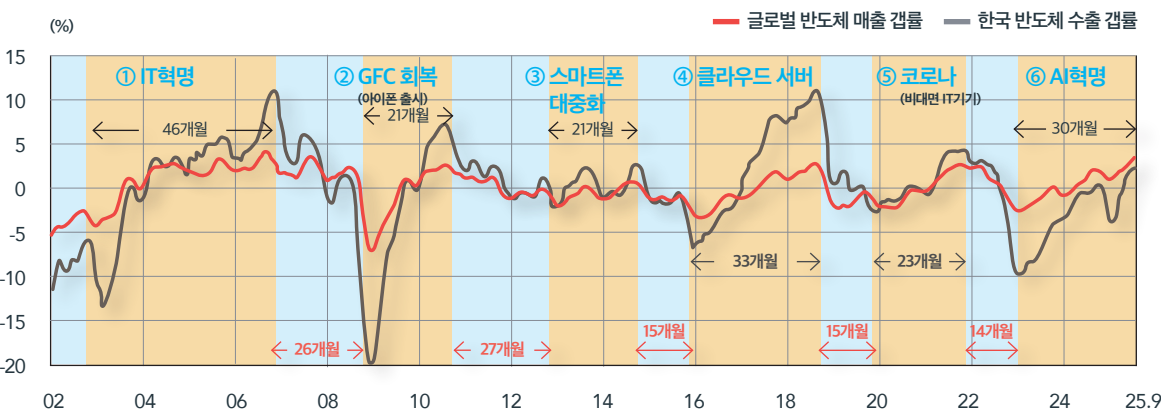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대전제는 '시장 경제와 균형이론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 여부다. 양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테슬라처럼 가격 할인 대책을 추진하면 시장의 실패(market's failure)를 불러와 이윤이 더 감소하는 자충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때는 삼성전자처럼 감산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불균형 이론과 국가 자본주의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시

<그림 2> AI로 촉발된 반도체 경기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장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불균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관련 반도체가 주도해 나갈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여건에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균형점에서 이탈했을 때는 시장 조절 기능에 의해 다시 수렴한다는 균형이론이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1980년대 초에 태동된 배로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에서는 시장 조절 기능이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자원 배분상 실패를 초래하고 참가자 모두 피해를 본다고 봤다. 이때는 국가가 개입하거나 선도기업이 나서서 수량을 조절해야 균형점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층 논의 중인 국가 자본주의도 이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업의 위상도 중요하다. 테슬라 같은 선도기업이 가격 할인을 추진하면 경쟁 여건이 빠르게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변하면서 초기에 확보한 기득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감산은 삼성전자 처럼 선도기업이 추진해야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고 가격이 오르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게임 이론으로 본 기업 전략

게임이론을 적용하면 더 명확해진다. 이 이론은 참가자별 이해득실에 따라 판가를 나는 ‘노이먼-내시식 이기적 게임’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샤프라-로스식 공생적 게임’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소비자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즐겨 쓰는 게임 방식이다. 후자는 시장 참여자들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꼬리 위험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양식(architecture)을 제공해 준다.

테슬라의 가격 할인은 다른 기업의 점유율을 빼앗아 어렵게 하는 근린 궁핍적인 이기적 게임이다. 게임 결과도 시장 전체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시장 질서만 흐트러뜨리는 제로섬 게임이다. 삼성전자의 감산은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참가자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생적 게임이다. 기업 이윤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서 산출한다.

초불확실한 시대에는 기업 이윤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시장에서의 신뢰는 기하급수적으로 추락한다. 소셜미디어 발달로 서로가 촘촘히 연결된 사회에서는 부정적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보다 전파 속도가 여섯 배 이상 빠른 네트워킹 효과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격 할인을 통한 포지티브 경영은 매출이 증가할수록 불확실한 위험에 더 노출돼 기업 이윤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경영 계획만을 수정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반면 감산을 통해 비용을 감축하는 네거티브 경영은 매출 증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면 기업 이윤에 대한 믿음이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 경기에 달린 한국 경제의 미래

네거티브 경영은 최근처럼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는 여건에서 더 빛을 발한다. 산업 자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매출과 점유율이 늘수록 비용이 증가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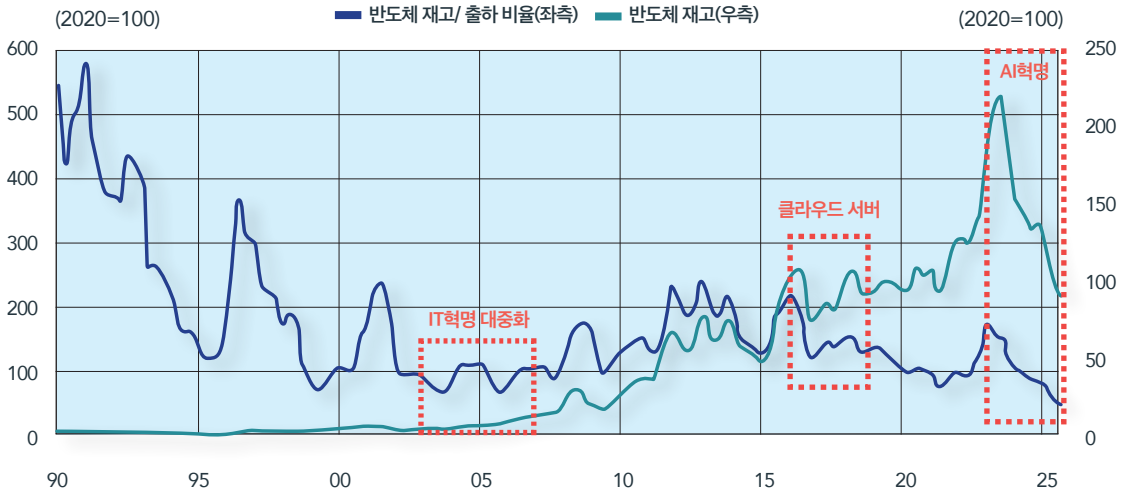
때문이다. 테슬라처럼 가격 할인을 추진하는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이윤이 감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기업의 운명도 엇갈려 왔다. 가격할인 대책 추진 이후 테슬라 실적과 주가는 정체돼 왔다. 하지만 감산 대책 이후 한때 위기론이 나왔던 삼성전자 실적은 작년 1분기 이후 크게 개선되면서 3배 이상 올랐다. 다 큰 혜택을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기업의 주가는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있다.

반도체 빅 사이클론이 살아있는 한 한국 경제는 밝다. 증시도 코스피 지수 목표치 5,000에 도달하자 다음 목표치를 1만 선으로 올리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한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이 남은 코스피 상장 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과 증시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와 증시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국내 반도체 재고 비율

자료 : 한국은행



조선시대 호조와 재정 운용

조선시대 중앙 행정기관인 호조는 현대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양전, 재정, 회계, 조세 업무를 담당했다. 호조는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양입제출)’이라는 원칙 아래 횡간(지출 계획서)과 공안(수입 계획서)을 통해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했다. 조선 후기 박문수는 각 관청의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한 ‘탁지정례’를 만들어 30만 냥 이상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은 전근대에 보기 드문 예산 수립·집행 체계를 갖춘 나라로, 위민과 민본의 정치 철학을 재정정책에 반영한 국가였다.

박광일 역사작가, 여행이야기 대표

국가가 운용하는 재정은 나라의 운영을 위한 지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시장 경제에서 소외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붙은 이유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이란 것이 중요하고 큰 규모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예산 수립 계획과 확정 및 지출,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 및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곧 국가 재정과 관련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지원 및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삼권도 분리되어 있지 않던 조선시대 재정 운용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과 차이는 있지만 조선 역시 명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 중심에는 중앙행정기관인 호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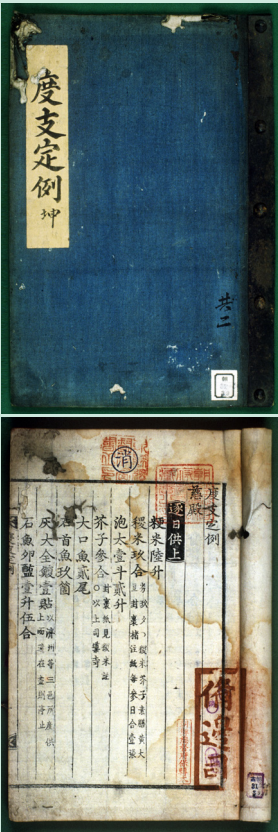
호조, 조선의 재정을 관장하다

조선시대 중앙관청의 핵심은 6조다.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도 6전 체제로 되어있으니 행정기관인 6조도 이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이호예병형공’으로 알려진 관청 가운데 이조는 인사를 담당하며 예조는 문서와 외교 업무, 병조는 군사 업무, 형조는 법률 담당, 공조는 건설과 토목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호조는 지금의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재무부)와 같은 행정관청으로 양전, 재정, 회계, 조세 업무를 맡았다. 호조 산하의 기관인 판적사는 호구, 토지, 조세, 부역 등 세금에 관한 업무를, 회계사는 서울과 지방에 보관하고 있는 미곡과 포, 동전 등의 연도별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호조가 조선 전체 재정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인 영조 때 호조가 관할하던 재정 규모에 관한 내용이다. ‘쌀 10만 석, 면포 6만 필, 동전 16만 냥’이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데 조선시대에는 호조 이외에 대동미를 관장하던 선혜청, 물가 관리를 하던 상평창 등의 재정 운용 관청이 또 있었기 때문이다(조선 후기 정부 세입은 약 100만석~150만 석 정도). 지금처럼 재정경제부가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도 지금과 다른 것이 있었다.

현물세 운용의 문제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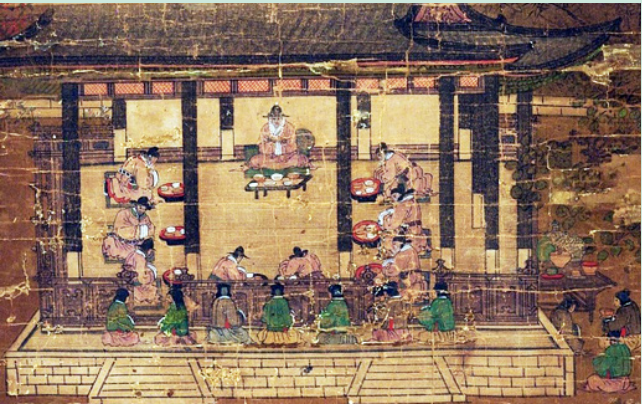
무엇보다 재정 운용에 필요한 노동력을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성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이 조선 후기 일부 임금제로 운용이 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요역을 위해 들어가는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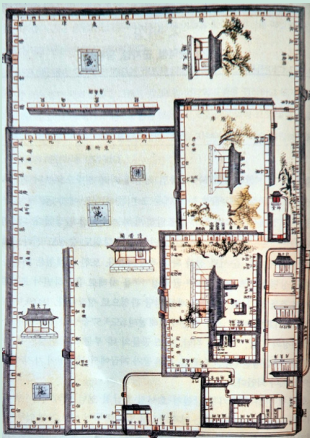
01



02



03



04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분위기였으니 세금 납부 과정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비용에서 제외되었다. 조선에서 백성이 낸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방관을 거쳐 정부, 곧 한양의 해당 기관에 전해졌다. 그런데 세금이 현물인 쌀이나 베, 특산물이었던 탓에 그 운송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문제는 이 세금에 ‘원액주의’란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곧 수납하는 기관은 정해진 액수의 세금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납부자인 백성이나 지방 관청이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공납으로 바치는 굴을 한양에 보낼 때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 원래 수량보다 훨씬 많은 굴을 보내야 했다.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중간에 상하는 굴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한양까지 옮기는 노동력, 배를 운용하는 비용 역시 제주도 백성이 담당해야 했으니 드러난 세액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훨씬 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요즘 상황으로 비쳐 본다면 세금보다 수수료 부담이 큰 셈이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효율성을 위해 지방의 관청에 일정한 재정 운용권을 넘겨주었다. 이는 조선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인 중앙집권화 이념에 반하는 것이지만 재정 효율성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먼저 지방에서 처음부터 지방 관청이 필요한 일정한 양의 세금을 떼고 서울로 올려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막대한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조선시대 평안도와 함경도, 제주도에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를 현지에서 쓰도록 한 것도 이러한 예의 하나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앙 정부의 세금 수입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다. 매년 쌀과 돈을 내리는 것보다는 토지나 노비를 지급해서 그 수입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근대에 일반적으로 쓰던 방식이다. 이를 각사자판(各司自辦)이라고 하니 해당



05

05 경화문광장 재개장 전 광장바닥에 위치했던 '호조의 터' 표지석

관청이 스스로 재정 업무를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이 방식은 지방관의 권한 남용이나 비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해유’라는 서류를 만들었다. 해유는 지방관이 후임자에게 재직 중 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인수인계할 때 생기는 문서다. 이 문서는 관찰사, 호조, 병조가 확인한 뒤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야 지방의 사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해서 문서 이름이 ‘해유(解由)’라고 붙었다. 곧 지방관이 자의적으로 재정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편으로 지방관의 마지막 책임이 재정과 관련한 것이었음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정부 재정과 별개로 왕실 재정이 존재했다. 그리고 면세전의 존재, 수조권의 문제 등이 현재와 다른 조선시대 재정 운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계획의 틀: 횡간과 공안

이러한 차이를 참고하여 호조의 구체적인 재정 운용 모습을 보자. 조선은 건국 후에 국가 예산 운용 계획, 곧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문서를 만들었다. 바로 <횡간>과 <공안>이다. 이 가운데 횡간은 국가 재정을 담당한 호조의 지출 계획서다. 지출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당시 일반적인 표기와 달리 가로쓰기를 했다고 해서 횡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공안은 이와 반대인 수입 계획서, 곧 세금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횡간은 조선 건국 후 여러 번의 수정 끝에 세조 때에 완성되었다. 조선의 재정 원칙이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방식(양입제출: 量入制出)’이었으니 원칙적으로 횡간이 제대로만 운용된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국가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횡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관아의 벽은 4년마다, 창호는 2년마다 수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세세한 내용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재정이란 것이 그렇듯이 시간이 흐르며 정규 지출 외에 비정규 항목이 많아지며 횡간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다.

박문수의 탁지정례, 재정 혁신을 이루다

영조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호조판서에 당시 명망이 높았던 박문수를 임명했다. 호조판서가 된 박문수는 관청들의 지출에 일정한 규칙이 없으니 ‘정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각 관청의 재정 지출에서 먼저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규정 밖의 것은 모두 품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각 관청의 지출 항목을 정하기

위해 먼저 초안을 제출하도록 한 뒤, 호조의 관리와 함께 문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정리한 시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지 모르니 다시 관청으로 돌려보내 보완을 하도록 한 뒤,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하루에 1~2개 관청을 검토했고 몇 달 만에 모두 140개에 이르는 관청을 빠짐없이 정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탁지정례>를 통해 30만 냥 이상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탁지정례가 효용 가치가 있자 또 다른 재정 담당 관청인 <선혜청정례>를 만들도록 했으며, 이후 나라에서 예산이 소용되는 일이 있을 때 이 탁지정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조선 재정정책의 의의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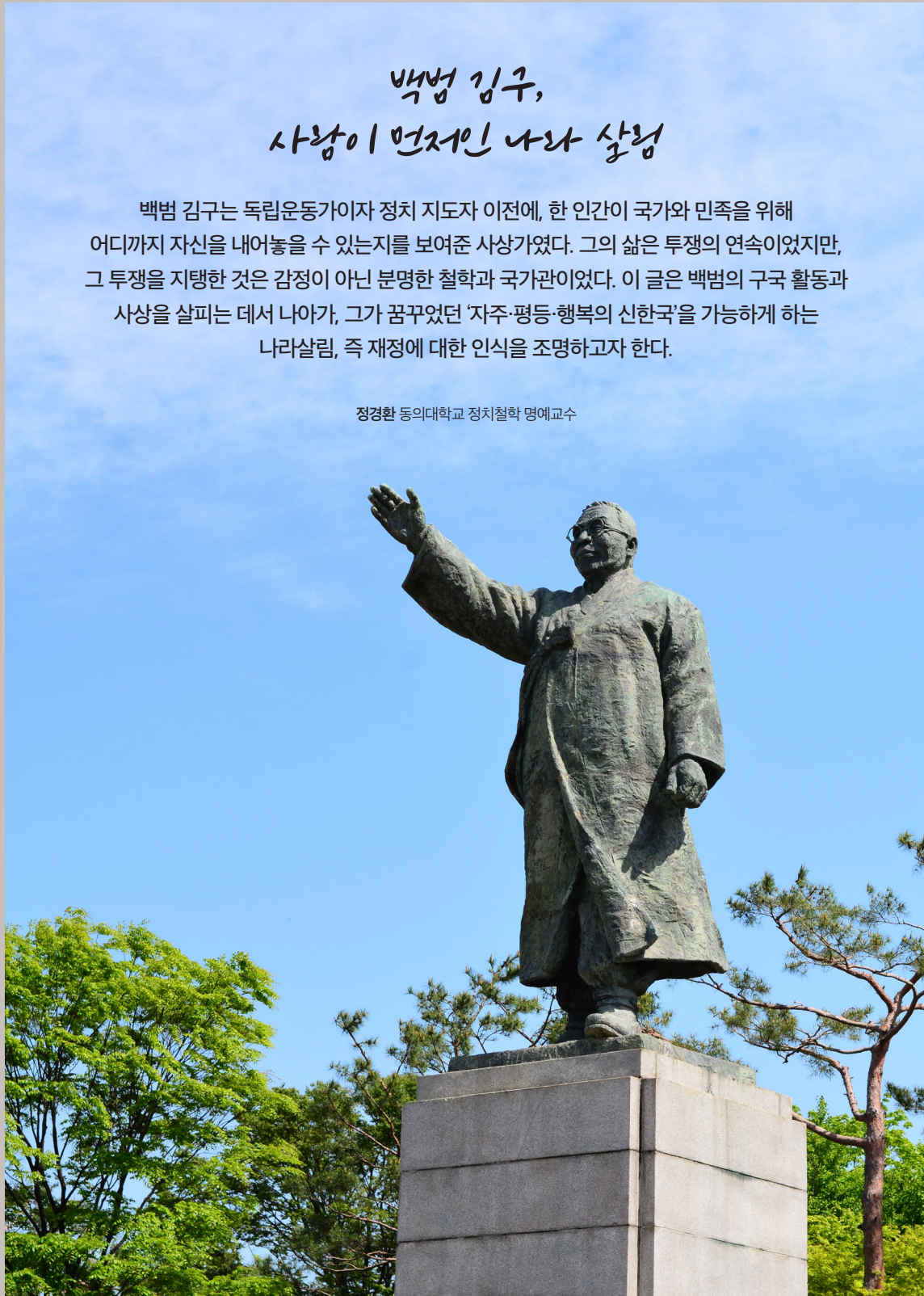
조선은 전근대 국가에서 보기 드문 예산 수립, 지출이라는 재정 운영을 한 나라였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감시 감독할 의지와 능력이 왕과 관료들에게 없어진 조선 후기에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중간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인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 곧 각 관청의 서리들이 이들 세금 징수와 납부 과정에 간여하였는데 서리들의 급여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19세기 말, 전국에서 일어난 민란과 한양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조선의 재정 운용 정책에 관해서는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호조의 역할, 그리고 재정 운용의 내용을 보면 조선은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정한 것은 위민, 민본의 정부라는 덕목을 보여준 것이다. 또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구휼과 진흥에 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조선이 생각한 정치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백범 김구,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살림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 지도자 이전에, 한 인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상가였다. 그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지만, 그 투쟁을 지탱한 것은 감정이 아닌 분명한 철학과 국가관이었다. 이 글은 백범의 구국 활동과 사상을 살피는 데서 나아가, 그가 꿈꾸었던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살림, 즉 재정에 대한 인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정경환 동의대학교 정치철학 명예교수



서언

백범 김구에 대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할 때마다 숙연한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 BC 2333년 한 민족이 조선을 건국한 후 수많은 성현들이 명멸했지만 백범 김구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선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민족과 조국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가 태반이다. 그러나 백범 김구는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73년의 삶 전체를 오롯이 민족과 조국에 헌신한 참된 애국자의 표상(表象)이다.

백범은 그 오랜 세월동안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광복을 위해 일관되게 헌신한 것은 확고한 자기 나름의 사상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사상과 철학은 무의미하다. 백범은 민중이 처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조국의 위기상황에 방관하지 않았다. 그가 “내가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는 일신(一身)이나 일당(一黨)의 이익에 구애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글은 백범의 애국 활동과 사상을 간략히 언급하고 그가 나라살림 즉 재정(財政)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물론 백범은 학자가 아니기에 재정문제에 대해 뛰어난 학설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글은 없지만 그의 생애 전체와 글들 속에 담겨있는 나라살림에 대한 그의 생각을 체계화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백범 김구의 구국 활동과 사상 체계

백범 김구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여가던 한말 시기인 1876년에 태어나 해방정국인 1949년에 서거하였다. 백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기였다. 백범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구국 활동은 우선 동학운동에 참여하면서 표출되었다. 그는 몰락한 양반의 자식으로 상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다. 신분이동을 위해 17세 되는 1892년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민씨 세도정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낙방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다. 이처럼 시대의 불평등한 질곡에 분노하고 있던 백범에게 만민평등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동학은 새로운 개혁의 세상을 알리는 고고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1. 백범사상연구소(편), 『백범어록』
(서울: 사상사, 1974), P.179.

그는 바로 동학교인이 되어 나중에 동학의 황해도 접주가 될 정도로 지역적 신망을 얻어 본격적인 구국 활동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의병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김이언 의병부대의 선봉장으로 만 20세의 나이로 강계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21세 때인 1896년에는 황해도 치하포에서 일본인 밀정인 토전(土田)을 맨손으로 격투하여 응징하는 유명한 ‘치하포사건’을 일으켜 체포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옥중생활을 했다. 기적으로 탈옥한 후에는 고향땅에서 교육 사업을 통한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에서 백범의 독립운동은 민족사의 신화로 민족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가열차고 처절했다. 특히 1911년 105인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7회에 걸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의 목숨을 너희가 빼앗아도 나의 정신은 너희가 빼앗지 못하리라”² 절규하면서 불굴의 투쟁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1945년 11월 한국할 때까지 풍찬노숙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살신성인의 자세로 투쟁했다. 해방 후에는 완전하고 독립된 신한국 건설을 위해 반탁운동과 통일운동에 매진했다.

이상과 같이 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행한 그의 구국 투쟁은 자신의 오래된 정치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약하겠지만 크게 자주적 독립국가론, 주체적 통일국가론, 민주주의 실천의지론 및 문화국가창달론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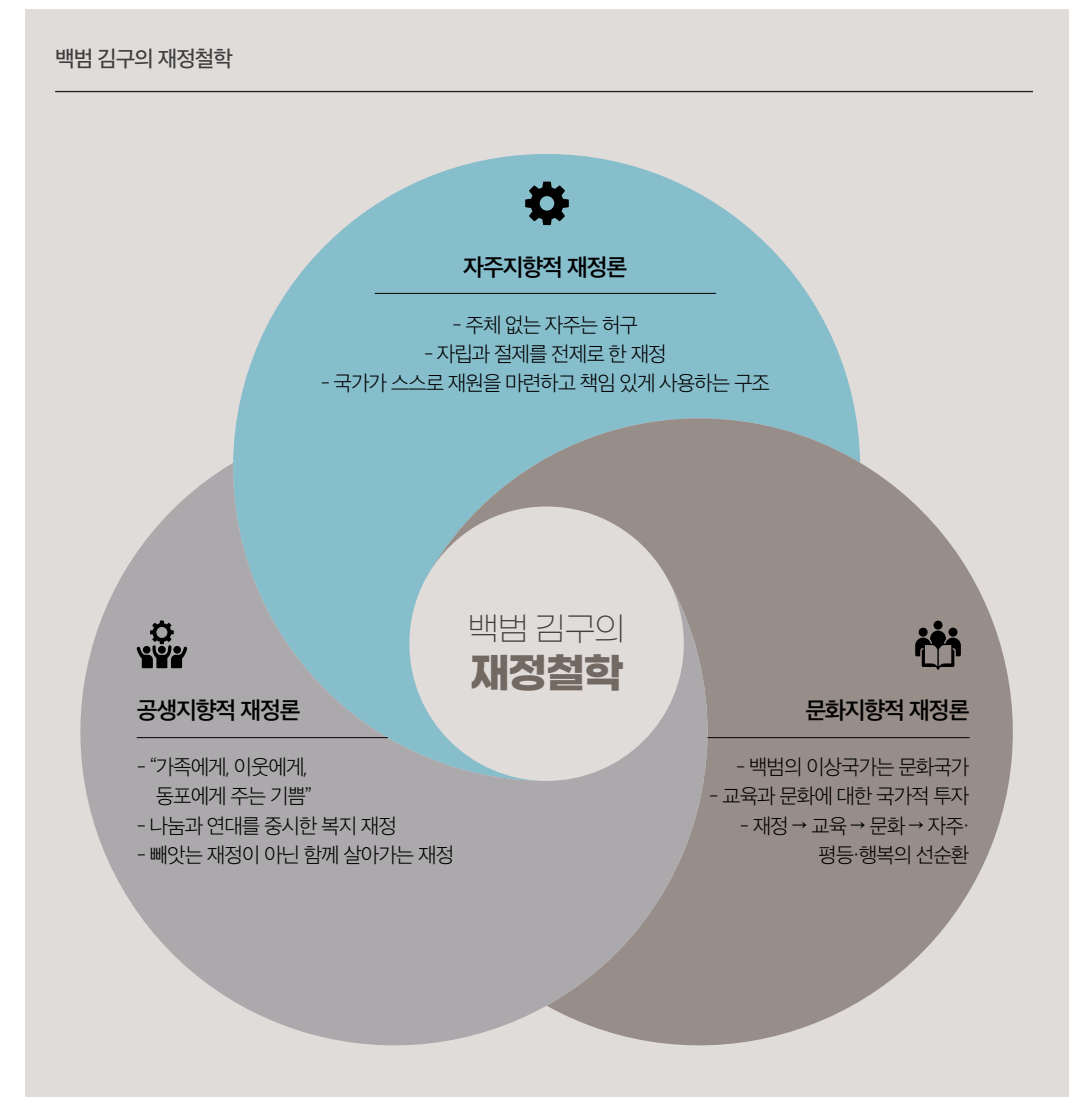
백범 김구의 나라살림에 대한 재정론

백범김구는 늘 “자주 평등 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³ 주장하였다. 이러한 신한국 건설의 주요한 사상적 내용에 재정정책에 대한 나름의 구상을 간간히 설명하고 있다. 그의 재정철학을 정리하면 우선, 자주지향적 재정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치철학적으로 자주는 반드시 주체를 전제한다. 주체 없는 자주는 허구일 뿐이다. 재정(財政)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경비의 지출과 그 재원의 조달을 총칭하는 것”으로⁴ 이해된다. 즉 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수단을 획득, 관리, 소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경제활동”이라고⁵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에서는 국회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크게 자원배분의 조정과 소득의 재분배 및 경제의 안정화 조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백범이 생각하는 재정철학은 이러한 모든 재정의 정책적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의 자주지향적 재정론은 자립과 절제를 전제한다.

2. 김구, 『백범일지』(서울: 교문사, 1980), P.168.
3. 백범사상연구소(편), 앞의 책, P.56.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 중.
4. 차병권, 『재정정책론』(서울: 박영사, 1981), P.13.
5. 이해동, 『재정학』(서울: 정연사, 1954), P.2.

둘째, 그의 재정철학은 공생지향적 재정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는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에서 “인후지덕(仁厚之德)”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타주의적 복지재정론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재정철학은 문화지향적 재정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의 이상국가론은 문화국가론이다. 그는 문화입국과 국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적 재정투입은 결국 선순환되어 자주와 평등과 행복의 신한국 건설의 토대가 될 것으로 그는 확신하고 있다. 세월이 흘렀지만 백범의 재정철학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나라살림에 필요한 사상적 자산이 되고 있다.



새해,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을 학습하다 “새해 예산과 미래 전망을 탐독하는 지혜”

2026년 새해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국민의 소비심리가 함께 움직이는 해다.

정부가 어디에 재정을 투자하느냐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결국 같은 경제의 두 축을 이룬다.

1월은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AI 슈퍼사이클, 인간과 기술의 공존, 변화하는 소비심리 등 모든 것을 동시에 조망하는 두 권의 필독서를 추천한다.



『2026 한국경제 대전망』

오철, 이근 외 35명 공저 | 21세기북스

이 책은

국내 최고 경제전문가
35인이 참여하여
AI, 지정학, 산업 등
2026년 한국경제를
둘러싼 핵심 의제를
다각도로 심층 진단한
필독서

국내 최고 경제전문가 35인이 참여하여 AI, 지정학, 산업 등 2026년 한국경제를 둘러싼 핵심 의제를 다각도로 심층 진단한 필독서다. 정부가 어떤 산업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AI 슈퍼사이클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재정 투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준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와 반도체, 전력 시스템, 데이터센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연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선·방산·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 문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 전략 등 정책 입안자와 경제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시경제 현황과 전망을 담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6』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권정윤, 한다혜, 이혜원 외 6명 공저 | 미래의창

이 책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이끄는 명실상부한
한국 소비 트렌드로
2026년 대한민국의
소비 행태와 경제 심리를
다각도로 진단한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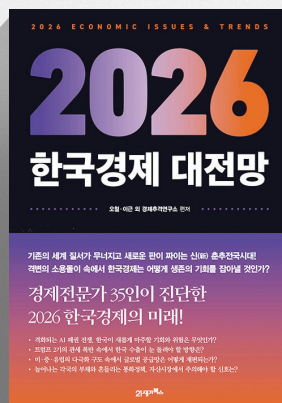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18년 연구를 담은 이 책은 'AI와 인간의 공존'을 2026년의 핵심 화두로 제시한다. 켄타우로스의 메타포로 표현되는 이 공존은, 기술 효율성과 인간 가치의 결합을 의미한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10주년이 되는 2026년을 AI 시대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한다. 제로클릭(검색 방식 변화), 필코노미(감정 소비), 레디코어(미래 대비 준비), 픽셀라이프(소규모 다품종 소비) 등 10대 트렌드를 통해 소비자 심리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향후 정부의 산업 정책과 민간 시장의 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6 경제·재정 이슈 트렌드

- **AI 슈퍼사이클 시대:**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 R&D 예산과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 **조선·방산·원전 재정 지원 강화:** 글로벌 수주 호조에 따른 수출 금융 지원과 해외 프로젝트 보증 예산이 증액된다.
- **잠재성장률 3% 달성 전략:** AI 중심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재정을 집중 배분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2026 경제·재정 이슈 트렌드

- **AI와 인간 공존:** 휴먼인더루프, 윤리적 판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경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다.
- **감정 경제의 성장:** 필코노미 현상으로 감정 소비(웰니스, 문화, 경험)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 **소비 패턴의 변화:** 제로클릭, 프라이스 디코딩, 픽셀라이프 등으로 유통과 소비 구조의 혁신이 필요해진다.



한국재정정보원 등 13개 기관, 공공기관 디지털 협력 협의회 발족

AI·정보보안·블록체인·데이터 분야 협력 본격화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을 포함한 13개 공공기관은 지난 12월 18일(목)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본원에서 '공공기관 디지털 협력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입, 공공부문 정보보안 강화, 정보기술(IT) 정보서비스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13개 기관은 AI·정보보안·블록체인·데이터 분야 등 세부 협력 분과를 운영하면서 기술협력, 성과확산,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통계정보원 등이다.

윤석호 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공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께서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기관 표창

dBrain+·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 혁신 인정받아 수상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5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데이터 기반 재정정보 서비스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 국가재정 투명성 제고 활동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재정원은 dBrain+ 및 e나라도움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중앙정부 재정 운용과 국고보조금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 체감형 데이터 공개로 국민의 재정 이해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

윤석호 원장은 "이번 수상은 재정정보 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전 임직원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데이터 산업진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정원은 향후 재정정보 데이터 품질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 체감형 재정 정보 서비스 개선, 공공-민간 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애독자 코너

• 2026.01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한국재정정보원이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결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dBrain*
- ② e나라도움
- ③ 재정정보분석센터
- ④ 열린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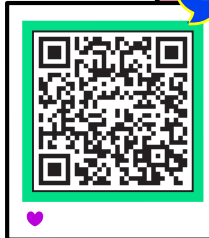


힌트!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6.1.25. ~ 2.16.

★ 지난해 정답: FIS 고객센터

★ 지난해 퀴즈 당첨자

010-****-9324 010-****-6272

010-****-3867 010-****-7913 010-****-7526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26 병오년 말띠 해 특별전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Special Exhibition for the Year of the Horse
The Famous Feast of the Horse

2025.12.16.-
2026.3.2.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Special Exhibition Hall 2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한파 6대 행동요령

이렇게 행동하세요!



한파행동요령



기상 상황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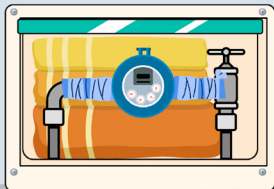
야외활동 자제



따뜻한 장소 휴식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수도관 동파예방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행정안전부